石油市場의 구조변화와 石油産業의 대응

安 柄 勳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교수〉

1. 머리말

필자는 지난 10여년간 에너지部門의 중장기 전략문제를 다루어 오면서, 에너지部門 전체를 동시에 고찰하는 소위 종합에너지 분석에 연구 역점을 두어 왔다. 즉, 전력부문, 석유부문 등의 供給部門과 가정·상업, 산업 및 수송부문등의 需要部門等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상호 연관성이 높은 이들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상호 간접효과 또는 2차적 효과를 짚어볼 수가 있었다.

이러한 에너지部門의 종합분석을 함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간접효과가 나타나는 부문이 石油産業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필자는 石油産業의 종합에너지 수급전략상의 위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감히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되었다.

石油業界의 집안사정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이 필자보다도 더욱 깊게 알고 계실 것으로 믿어 일방 두려움마저 느끼게 되나, 石油業界를 제3자로서 밖에서 들여다보면서 느낀바, 특히 에너지部門 전체의 종합전략측면에서 검토되는 바를 요약하여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石油業界는 최근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여 있다. 잘 알려진 바대로 제2차 석유파동 후 원유가격의 앙등과 이로 인한 석유수요의 감퇴, OPEC의 하류부문 진출확대등 세계 석유시장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석유수요감소로 설비가동율이 저하되고, 제품수요의 경질화에 따른 중질유분해설비의 투자압력이 증대되며, 金利·換率上昇에 따른 精油産業이익률저하 내지는 赤字幅의 증대를 피할 수 없어, 혹자는 石油産業이 斜陽産業이라고 까지 부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精油産業의 경영기반 악화와 석유시장 여건악화에도 불구하고, 금세기말까지 총에너지공급의 약 40%를 담당하는등 우리나라 主宗에너지로서의 역할을 계속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는 바, 石油産業의 금후 향방은 국내에너지부문전체,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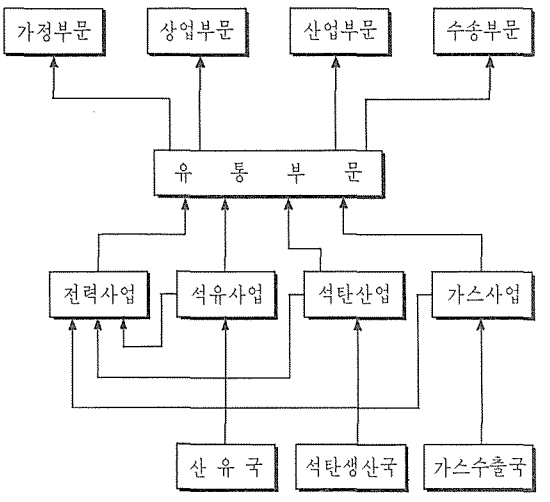
다. 이에 따라 石油産業은 사양산업으로서가 아니라, 국가경제를 받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서 그 역할이 재인식되어야 하며,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을 그야말로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石油業界뿐 아니라 에너지부문전체의 과제로써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Ⅱ. 石油産業의 位置와 課題

먼저 국내에너지部門에서의 石油産業의 위치를 살펴보자. 국내에너지部門을 도식화하여 보면 〈그림-1〉과 같이, 石油産業은 석탄 및 전력사업과 함께 가정·상업부문, 제조업 중심의 산업부문 및 수송부문등에 연료 및 원료를 제공하고 있다. 石油部門은 이들 수요부문 외에도 발전연료로서 총국내생산의 약 반에 가까운 B-C유를 제공하고있어, 현재의 석유제품의 역할은 각 부문에 고루 침투하고 있다.

특히 국내총석유제품생산의 약 반에 해당하는 B-C유는 그동안 산업의 원동력 역할을 담당하여, 발전부문 외에도 산업부문의 보일러연료로서 主宗의 위치를 점하여 왔으며, 가정·상업부문에서도 아파트단지의 중앙난방연료 및 대형건물의 난방연료로서 이용되어 왔고, 수송부문에서도 대형선박연료로서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다른 석유제품에 비해 타연료와의 代替性이 높아 기존시장점유율이 크게 감소되어 가고 있으며, 상당기간 이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석유류제품의 가격상승에도 크게 기인하지만,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크게 부각된 脫石油政策기조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력부문은 脫石油電源개발계획의 강력한 추진으로 80년대 초에 총발전의 80여%에 해당하던 油類發電이 원자력 및 有煙炭發電으로 급격히 선회함으로써 1984年에 54%, 2001年에는 약 7%로 그 구성비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B-C油의 주요시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洋灰業界는 거의 모두가 有煙炭으로 대체되었다. 일반산업체에서 마저도 有煙炭이용확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B-C유의 수요는 몹시 위축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국내에너지부문 구조



이와는 달리 輕油를 비롯한 中間製品의 수요는 脫石油政策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트럭 및 버스를 중심으로 한 수송부문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수송부문 연료로서 타연료와의 대체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추진하여온 脫石油政策은 석유제품 수요의 균형적 감소를 성취하기보다는 특정연료, 즉 B-C유 수요를 줄인 「脫B-C유 정책」인 셈이 되었다.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내석유제품 수요의 輕質化現狀을 초래하였으며, 石油業界가 당면하고 있는 큰 과제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국내의 석유제품수요행태의 변화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産油國의 下流部門進出에 따른 제품수출입압력증대, 환율의 계속적인 변화에 따른 환차손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가격 및 제품수출입의 자율화 압력도 점차 증대되는 등 精油業界가 처하게 될 경영환경은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石油業界의 당면과제들은 石油産業 차원에서뿐 아니라, 에너지部門 전체의 입장에서 객관성 있게 분석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石油業界의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Ⅲ. 綜合에너지 需給側面에서 본 石油需給構造의 再照明

石油産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중 석유제품수요의 輕質化추세는 石油産業內部의 주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部門 전체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보겠다. 즉, 石油波動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된 脫石油政策에 의해 기인된 현상인 만큼, 석유시장이 안정되어가고 있고, 脫石油명제가 脫B-C油化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석유제품 수급구조상의 문제점은 에너지部門 전체의 종합수급측면에서 재검토됨이 타당하다고 보겠다.

먼저 전력부문에서의 급격한 脫石油計劃은 B-C유 수요를 줄여 석유제품 수요의 輕質化현상을 가속화시킨다. 발전연료가격상의 차이로 인해 原子力 및 有煙炭發電위주로 옮겨갈 것은 자명한 추세이나, 시기 및 규모에 있어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현재의 전원개발계획은 적정수요를 예측하여, 이 수요를 최소비용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소위 기저부하(Baseload)용으로는 原子力이나 有煙炭發電이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電力부하가 낮은 밤에 양수하였다가, 부하가 높은 낮에 낙차발전하는 揚水發電까지 곁들여 20~30만 KW급의 油類發電의 역할은 급격히 감소된다. 문제는 발전소 건설기간이 길고, 수요예측이 기대보다 저하되게 되면, 原子力, 有煙炭 등의 연료비가 싼 발전소 위주의 설비구조를 갖게 되어, 설비과잉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油類發電等의 中間負荷用 설비는 발붙일 곳을 잃게 된다.

요약하면, 電源개발계획수립상의 수요의 불확실성을 고려함으로써 原子力발전의 과잉투자를 피하고, 이에 따라 中型有煙炭발전 및 기존油類發電의 역할이 일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바람직한 計劃수립방안이라 보겠다. 世界銀行 보고서에서도 기존 유류발전소의 수명을 연장시켜 이용하는 방안을 추천한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이러한 電力部門의 재검토는 과도기적인 조치일 뿐, 궁극적으로는 石油發電의 비중이 크게 저하될 것이다. 단지 이러한 과도기적인 조치로 石油産業의 주변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電力部門 다음으로 석유제품, 특히 B-C유를 소비하는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源構造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이다. 시멘트業界는 차치하고, 일반산업에서의 有煙炭 이용확대는 B-C유시장을 잠식한다는 차원에서보다도, 그 경제성 자체에 대한 정확한 사전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有煙炭의 직접비용은 B-C油에 비해 월등 유리하나, 有煙炭 이용에 따르는 종합비용의 규모는 분명하지 않다. 석탄수입비용외에 석탄수입기지건설비용, 중소수용가를 포함한 다수의 소비자들에 대한 안정공급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비용, 재처리 및 분진처리 등의 환경비용을 비롯하여, 有煙炭 이용확대에 의해 야기되는 石油部門의 추가분해설비 투자비용 등의 간접비용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가지 바람직한 代案은 기존의 유통체계를 상당부분 활용할 수 있는 COM이나 CWF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有煙炭의 잠재수요를 무리없이 개발시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石油産業이 종합에너지産業化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업이라 보겠다. 산업부문에서의 有煙炭 이용확대는 정부지원없이도 그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경직적인 에너지源의 다원화라는 차원에서의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겠다. 오히려 분진 및 재처리기술, 새로운 연소기술개발 및 신규형태의 석탄제품개발 및 철저한 사회, 환경 및 경제성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문도 장기적으로는 점차 안정공급이 가능한 有煙炭으로의 전환(특히 보일러연료시장에서)은 불가피할 것이며, 기존 B-C유 거래선에 대한 연료전환서비스는 石油業界의 신중한 참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B-C油수요가 감소하는 것과는 대칭적으로 輕油를 비롯한 中間석유제품의 수요증가가 석유수요의 구조상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수송부문, 특히 公路貨物 및 公路여객수송에의 경유수요가 증가함을 감안할 때, 이 부문에서의 연료절약 내지 타연료로의 전환은 석유의존도의 균형있는 감소, 제품수급불균형감소에 직접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중 수송부문, 특히 트럭 및 버스에서의 에너지절약사업은 그 종합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다. 또한 輕油 중심의 公路貨物은 重油를 사용하는 연안해운으로 전환함으로써 2중효과를 볼 수 있음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상업부문에서의 B-C유 수요가 아파트단지 및 학교, 병원, 목욕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경 공해요건의 강화로 도시 가스로의 대체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 부문에서의 도시가스와의 경합도는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석유제품수급의 불균형문제를 종합에너지수급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국제석유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80년대말까지는 석유제품, 특히 B-C유의 경제적 가치가 재평가되어야함도 지적될 수 있다.

Ⅳ. 石油業界의 對應

석유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환경요인을 종합수급전략 차원에만 맡겨둘 수는 없을 것이다. 石油業界로서는 중·단기적으로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석유제품수요의 감소 및 수급불균형에 나름대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경제 전체가 추구하는 시장기능의 강화, 즉 제품가격 및 수출입자율화의 움직임에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長期的 관점에서의 경영의 다각화, 즉석유사업의 수직적 결합의 추진과 石炭을 비롯한 타 연료시장으로의 수평적 결합을 통한 종합에너지會社化의 전략이 지체없이 수립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精製施設의 柔軟性 提高

종합에너지수급 차원에서 석유제품 수요의 輕質化현상이 일부 완화되거나 지연된다 하더라도, 단순정제설비 위주의 경직적인 생산구조를 보유한 국내석유업계로서는 수급불균형에 나름대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가능한 대처방안은 다음 6가지중 일부 또는 병행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輕油등 中間제품수요에 맞추어 국내정제설비를 가동.
- B-C油등 重質제품수요에 맞추어 가동
- 輕質原油도입의 확대
- 輕油등 中間제품수요의 절약촉진
- 重質제품수요의 개발 및 수요감퇴 지연
- 重質油분해설비에의 투자등 정제설비의 柔軟性제고

첫번째 경우는 수요량 만큼 中間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B-C유는 공급과잉이 될 것이다. 국제시장에서의 B-C유 가격수준 및 공급상황을 감안할 때, 이 제품의 수출처리는 어려울 것이다.

두번째 방안은 반대로 輕油등 中間제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며, 국제시장에서의 안정적 수입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겠다.

세번째 대안은 중간유분이 높은 경질원유를 수입함으로써 공급과잉이나 공급부족을 피하는 방안이다. 최근 경질원유 및 중질원유의 가격차이가 분해설비투자폭을 밑돌고 있어, 이 방안을 추천하는 연구결과들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과도기적인 현상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3~4년간은 국제시장추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경질원유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겠다. 특히 경직화된 생산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 정유업계의 국제시장변화에 대한 적응력제고의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네번째 및 다섯번째 방안은 石油業界의 노력보다도 앞서 검토한 종합에너지수급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방안은 국내정제설비의 柔軟性提高이다. 이는 重質油분해설비에의 투자를 의미하며, 石油産業의 재정적부담이 증가됨은 물론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관련기관들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시기 및 규모를 바라다 보는 입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하와이 東西文化센터의 연구보고서를 비롯한 소위 Globalist 그룹의 의견은 輕質化에 따른 重質油분해설비가 과잉투자되어 오히려 輕質제품가격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아졌으며, 輕質原油의 가격도 안정되어 있어, 重質油분해설비의 경제성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重質油분해설비도 産油国이나 原油수송비가 저렴한 지역 중심으로 전개되어

야 하고 韓國과 같은 극동지역에서의 분해설비 투자는 비경제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Globalist 의 관점은 세계석유시장의 비용경제적 交易패턴을 제시하는 관점에서 매우 타당하고, 또한 3～4 년을 내다보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전략이라 보겠다. 그러나 이러한 Globalist 그룹의 관점은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으로서는 부적당하다고 보겠다. 즉, 국내정유업계는 높은 해외의존도 및 경직적 생산 구조에서 기인한 교섭능력(Bargaining Power)의 취약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의 전략적 차원에서의 설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OPEC의 下流部門進出에 따라 기대되는 제품수입압력의 증대와 제품교역 증가에 따른 국제석유제품시장의 수급상황의 수시변화는 국내정유업계내지는 국내에너지 部門의 전략적 지위의 확보를 더욱 필요하게 하고 있다.

물론 重質油분해설비는 단위설비당 투자가 높아 과잉설비투자로 연결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보겠다. 특히 国内精油業界가 과거와 같이, 市場先占이라는 관점에서 투자과욕을 보이면 과잉투자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겠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러한 현상은 도입인가 신청선에서 머무를 것 같다. 인가를 받은 후 과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갈 것인가는 事業妥當性에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느냐에 달린 것 같다. 최근의 국제석유시장의 안정화추세에 힘입어 분해설비 계획추진에 다소 지연이 예상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즉, 重質제품가격과 中間제품가격과의 차이가 분해설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歐美諸國의 경우 제품가격이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들 제품간 가격차가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됨으로써 분해설비의 경제성이 구현될 수 있는 체제하에 있음에 반해, 국내석유 제품가격이 정부의 규제하에 일부 왜곡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분해설비투자의 경제성은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보겠다.

결국 국내 精油業界의 분해설비투자를 통한 柔軟性 확보는 적정선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수준의 분해설비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국내석유제품 가격구조의 재편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V. 石油製品價格의 自律化

국가경제의 정책기조가 시장기능의 활성화 및 自律化에 있는 만큼, 여건이 형성된다면 石油産業에서의 自律化 움직임은 불가피한 추세라고 보겠다.

많이 거론되고 있는 자율화항목은 가격과 제품수출입분야라 하겠다. 우선 석유제품의 가격자율화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검토·논의되었으므로 다시 여기에서 상세한 재론은 피하기로 한다. 단지 석유제품가격의 자율화는 일시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제품별로, 유통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단계적 추진은 석유제품간 시장의 상이점을 감안하여 제품별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품별 수급상황은 분해설비도입을 전후하여 상이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제품별 가격자율화구조도 달라질 것이다. 즉, 분해설비도입 이전에는 B－C유의 공급과잉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격인상요인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수요창출을 위해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전력부문 및 일반업체에서의 有煙炭으로의 연료전환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즉 B－C유는 자율화되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부담증가는 없을 것이다. 단지 B－C유의 가격인하에 따른 타석유제품가격의 인상(적정수익률확보 목적)과 연결될 가능성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中間석유제품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이들 제품의 가격이 자율화되면 가격은 분명 인상될 것이다. 특히 燈·輕油는 서민용에너지이므로 物價政策 차원에서 자율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및 경제물동량수송의 주요수단중의 하나인 철도 및 트럭등 公路運送手段의 주연료로서 대체성이 부족해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輕油価格 등을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에 묶어두면, 정제설비 고도화에의 투자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輕油등 中間석유제품의 가격은 자율화시키지 못하되, 최고가격을 稅前기준으로 싱가포르 등 国際價格 수준에 연동화시킴으로서 분해설비투자여건을 조성시키고, 자율화에 따른 가격담합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별 자율화방안은 분해설비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제품수출입의 자율화가 이루어져 경쟁여건이 성숙되면 달라질 것이다. 즉, 분해설비투자를 통해 수급불균형 해소능력이 생기고, 거기에 적정가격선의 제품수입, 특히 輕油의 수입이 가능케되면 輕油를 포함한 中間製品의 가격자율화도 기대해 볼 만하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환율연동제, 가격구조의 합리화 등은 실질적 자율화의 전제로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製品輸出入의 自律化

지난 20여년간 정부는 消費地精製主義原則을 지켜왔으며, 제품수출입은 精油業者를 통해 허가사항으로 단기수급조절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국내산업기반의 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의 국제시장여건의 변화는 점차 이러한 消費地精製主義의 퇴조와 제품수출입의 자율화를 재촉하고 있다.

産油國의 수출용 정유공장이 잇달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OPEC제국의 1987년 수출가능량은 250~350만B/D로 예상된다. 이러한 産油國의 석유제품 수출증가는 석유제품가격을 인하시키는 요인이 되며, 이는 곧 제품수입압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국제시장의 여건변화로 보아 석유제품 교역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국내에서도 획일적인 消費地精製原則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국내제품시장의 상황을 분석하여 유연성있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석유제품수출입의 자율화도 가격자율화와 마찬가지로 제품별 자율화를 고려할 수 있고, 수출입권의 자율화도 동시에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분야에서는 가급적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율화를 통해 보다 경제성 있는 석유수급체제를 구축할 것을 추천하는가 하면, 일방 石油業界에서는 이미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업계에 제품수출입마저 풀어놓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IEA주요회원국들간에 OPEC의 수출제품에 대한 문호개방을 합의하였다고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뚜렷한 대처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 수출입의 자율화추진방안은 석유제품의 안정적 공급에 수반되는 안정공급비용(Security Cost)또는 위험부담비용(Risk Bearing Cost)의 테두리에서 그 기본 전략이 짜여져야 한다. 국제석유시장이 계속 안정되어 가고, 공급중단이나 가격폭등의 不測事態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가경제에 충격을 주어 나타나는 경제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소위 안정공급비용(例 : 石油事業기금, 비축기금 및 유사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값싸고 질이 좋은 製品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석유제품수출입 자율화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기조라 보겠다.

그러나 70년대에 겪은 바와 같이, 국제시장에서의 不測의 사태발생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규모의 차이는 있을망정 장기적으로 국내석유시장은 안정공급비용이라는 외적 요인(Externality)이 도사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固守해온 消費地精製原則은 이러한 외적 부담을 国内精油業界가 상당수준 감당한다는 논리하에 취하여 온 것이다.

만일 국제시장여건의 변화로 제품수출입 자율화의 단계별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러한 安定供給을 위한 위험의 형평배분의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험부담의 형평배분원칙은 제품수출입권자 선정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제설비및 분해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精油業界가 수출입권을 독점하게 되면 형평배분상 어려움이 없겠으나, 일반수출입업자도 참여하게 된다면 이들 일반업자들에 대한 위험부담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소위 「Hit and Run」식으로 국제시장여건이 양호할 때에 적극 수출입활동에 참여하다가 시장악화내지 不測事態발발시 시장을 이탈하여 버리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들은 단기차익을 향유하며 석유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부담을 기피하게 되며, 투자설비에 묶여 있는 精油業者들이 이를 모두 감당하여야 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 제품수출입권을 개방하여야 한다면, 「Hit and Run」을 방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품별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단계별 자율화를 한다면, 적정규모의 분해설비가 도입되기 전에는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輕油등 中間製品의 수출입을

자율화시켜 수급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단계에서는 수출입권도 자율화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국내경유생산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重質제품수입에는 문제가 있다.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해소가 목적이 아닌 한, 重質제품수입자유화는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높기 때문에 国内精油業界의 가동율을 더욱 저하시키게 되고, 국내설비에 부과되는 수요패턴은 더욱 파행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적정수준의 重質油분해설비도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양상이 바뀌게 된다. 즉, 中間製品의 수입자유화를 추진하더라도 수입권자에 제약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위험부담의 형평배분의 원칙에 따라, 수입권이 重質油분해설비투자자에 국한시키거나, 일반업자에게 개방할 경우는 분해설비투자기금 등의 위험부담을 부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先行보장이 없으면, 설비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수입권자 개방으로 인해 輕油가 직수입될 경우 분해설비가동률의 저하등)이 증가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분해설비도입과 더불어 B-C유의 수입자율화도 가능해 질 것이다. 특히 분해설비의 원료를 重質原油보다 B-C유를 택하게 된다면, B-C 유는 여러면에서 原油와 거의 동등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분해설비보유업자로서는 값싼 수입B-C유를 분해하는 것이 국내 B-C유를 분해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높아, 国内原油處理量을 줄이고 수입 B-C유 처리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바람직하기로는 현재 국내노후정제설비를 폐기하고, 이에 대체할 신규설비로는 단순정제설비 대신 重質油(B-C油) 분해설비를 도입케 하여, 이 設備容量에 해당하는 수입B-C유의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精油業界의 대외경쟁력과 분해설비의 경제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석유제품 수출입자율화는 석유제품이 연산품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단순이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제품별 수급구조전망과 안정공급을 위한 추가부담의 형평적 배분이라는 차원에 입각하여 앞서 검토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Ⅵ. 石油業界의 綜合에너지會社로의 成長

石油業界를 둘러싼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을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할지라도, 석유사업 자체만으로는 결코 밝은 전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겠다. 이는 궁극적으로 에너지수요의 증가폭 감소와 有煙炭, 原子力 및 가스 등에 의해 기존시장이 잠식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축적되어온 石油業界의 에너지부문사업에의 경험과 전문성을 타에너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석유업은 전력사업이나 무연탄사업에 비해 가장 민간주도형 운영을 해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石油産業의 경영다각화를 단계별로 추진한다면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 기존 석유정제·수입 및 판매사업에 上流部門進出을 추가한 소위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을 추진하며, 동시에 비용절감등 경영합리화노력을 경주하는 단계,

둘째, 石油産業의 기존去來先 또는 기존시장점유율을 가능한 한 유지하되, 석유제품과 일부대체에너지를 병행공급하도록 하는 기존거래선에 대한 종합에너지서비스제공의 단계(예 : 감소하는 B-C유 시장을 COM이나 CWF 등으로 보완 공급),

세째, 石油部門事業과 병행하여, 적극적인 대체에너지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기존거래선뿐 아니라 신규시장에의 진출을 모색하여 명실상부한 종합에너지회사(예 : 有煙炭發電事業등)로 재편성하는 단계 등을 들 수 있겠다.

제2단계의 기존거래선 위주의 종합에너지서비스제공은 기존석유제품 거래선의 타연료로의 전환부분을 보완공급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他에너지분야 진출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을 일부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기존거래선과의 거래를 통해 市場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기존流通채널(예 : COM 또는 CWF)을 계속 활용함으로써 유통상의 불확실성 감소를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보완적의미에서의 타에너지분야 진출은 기존석유사업과의 사회적 경쟁요인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추진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번째 성장단계로서의 적극적인 대체에너지사업 진출은 기존石油事業과의 보완적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고, 石油事業의 기존거래선 범주를 벗어나 모든 에너지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종합에너지産業化 전략이 되겠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石油事業部門과 신규대체에너지사업부문과의 내부적경합이 불가피할 것이며, 투자의 위험부담도 따르게 됨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성장전략을 위해서는 매우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전략이 여의치 않게 되면 기존사업부문마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적극적인 종합에너지회사로의 성장방안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기존의 타에너지 사업자와의 경쟁, 石油事業을 통해 구축한 에너지사업 경험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수입有煙炭을 대상으로한 에너지사업이 우선 고려됨이 바람직해 보인다. 有煙炭의 대수요처인 제철업, 발전사업 및 洋灰業 등은 이미 자체적으로 수입되고 있다. 일반업체대상의 有煙炭事業은 石油業界의 경영다각화의 좋은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종합에너지회사로의 재편성 움직임을 有煙炭事業을 통해 시도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石油業界가 有煙炭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先行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수용가입장에서는 有煙炭製品의 안정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有煙炭流通支援体制(Infrastructure)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는 수입기지에서 부터 소비지에 이르는 소위 Coal Chain에 전면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말한다. Coal Chain상 일부단계만 참여하게 될 경우 안정공급서비스에 대한 보장은 어려울 것이다. 결국 有煙炭공급사업은 상당한 초기투자를 필요로 한다.

다음으로는 有煙炭製品이 기존의 유통체계, 특히 대체성이 높은 B-C유의 기존 유통시스팀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 살려야 한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유연탄사업전개를 위한 제1단계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업계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탄석유혼합연료 또는 CWF사업 등이 좋은 예라 하겠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발전·제철·양회 등 대형장치산업을 제외한 기타 일반산업체들로 부터 적정경제규모의 수요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다. 有煙炭導入은 계약단계에서나 수송단계에서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일반産業体들만을 대상으로, 이러한 적정규모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정책방향으로서 有煙炭공급업체의 有煙炭발전사업에의 참여를 들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有煙炭발전소건설에 石油業界의 民資를 동원함으로써, 電力事業立場에서는 심각한 발전소건설확보 문제가 완화되며, 石油業界로서는 有煙炭需要處의 직접보유를 통한 수요의 적정경제규모확보가 가능해진다는 두가지 잇점이 있게 된다.

물론 電源開發事業 및 發電事業에의 민자유치는 또 다른 정책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다른 여느때 보다 그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보여진다. 電力事業에서의 적극적인 有煙炭發電所 건설계획, 건설재원확보의 어려움과 石油産業의 종합에너지회사로의 재편성 의지가 상승작용하여 石油業界의 有煙炭發電事業 참여는 어느 때보다 그 타당성이 높다고 보겠다.

단지 과거에도 일부 있었듯이, 電力事業에 경험이 부족하여, 중도에 포기하여 기존 電力事業者가 떠맡아야 한다든지, 또는 설비자체가 비효율적으로 건설·운영된다든지 하는 무시못할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나, 이들은 충분히 연구해결될 사항들이라고 본다.

그 외에도 에너지절약사업, 도시가스사업등 여러가지 대안이 있겠으나, 石油業界로서는 파행적인 종합화를 지양하고, 국내에너지부문을 종합적으로 분석·연구하여 국내에너지수요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일관성있는 종합에너지사업화 전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두서없이 石油業界의 당면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石油業界에는 여기에서 거론 못한 다른 주요과제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몇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세부문별 논의에 대한 기폭제가 될 것을 기대하였다.

石油産業은 국가기간산업으로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며, 비록 시장규모는 축소되어가더라도 업계는 그 사업영역을 보완확장함으로써, 명실공히 종합에너지회사들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한 국가경제에의 경제적 비용이 무시못할 수준이 될 것이다. *